

정부, 24억弗 대미투자 이행... “팩트시트 내용대로 공개”

재정경제부

野, 국회 동의 절차 여부 질문에
이형일 부총리 “국회 보고 절차 거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재경차관 “정치적 고려 없어”

정부가 한미 간 대미투자 합의에 따른 집행금 일부를 미국 측에 부쳤다고 밝혔다. 미 텍사스주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투자로 총 223억달러가 소요된다. 송금한 돈은 총 투자금의 10.7%인 24억 달러(3조2000억원)로 1차 이행 명목으로 추정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의 재경부 국정감사 도중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9월30일과 10월1일 각각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를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나서 10월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는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따져 물었



(왼쪽부터)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다. 그는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이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답했다. 또 텍사스발전소 건립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충족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6.3기가와트(G

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세우는 내용의 이른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달러 규모를 두고 양국이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밝힌 세부내용과 다를 수 있

다는 의혹에 대한 일축이다. 또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다. 상업 장려성도 저희가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올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방안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권대영 제1 차관은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및 상장 시점이 6·3 지방선거 직전으로 조기화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장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3~4분기)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정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 이후 상장일이 5월22일로 정해졌다가 5월27일로 변경됐다.

이어 “5월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심사를 벌여 전체 절차가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또 정책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서남권 반도체 부지, 정부는 제안하고 기업이 최종 결정”

산업통상부

野, 부지 선정 공정성 진실공방 추궁
김정관 “비호남도 후보지 제안했었다”
LNG 프로젝트, 중동전쟁 후 가치 생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었다”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

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해왔다고 답했다”며 담당 부처와 장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 공방’ 양상이라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고려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로 포함해 기업에 제안했었다고 밝히며, 자료 불일치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대미 투자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증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의 대상 사업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대미 투자를 발판 삼아 국익을 최우선으로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7대 지원패키지 연계,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을 골자로 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등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소충전소 80% 적자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

충전소 구축 목표 달성을 74.7%
수소차 등록 대수는 16.4%에 그쳐

산업운영 중인 전국 수소충전소 10곳 중 8곳이 적자를 내며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충전소 이용률이 급감하고, 적자가 누적돼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산업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258곳 가운데 80.6%(208곳)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연료규입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2021년 63.2%에서 해마다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실제로 최근 운영을 종료한 수소충전소 8곳 중 대전 대성, 전남 여수, 서울 이동식, 창원 중앙 등 4곳이 사업성 저조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구축 시 국고 보조율이 50%에 달했던 시설과 2024년에 지어진 신규 충전소도 포함됐다.

원료비 상승도 운영 여건을 악화시켰다. 전국 연평균 수소 판매가격은 2022년 kg당 8439원에서 올해(1~9월) 1만364원으로 22.8% 올랐으며, 일부 충전소의 최고가는 kg당 1만5000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의 연료보조금 예산 역시 올해 역대 최대인 191억원까지 늘었다.

이 같은 파행의 근본 원인은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충전소 구축 목표(660기 이상) 대비 현재 달성률은 74.7%(493기)에 달한다. 반면 수소차 등록 대수는 4만9220대로 목표(30만 대)의 16.4%에 불과하다. 연간 수소차 보급량은 2023년 1만256대에서 지난해 3784대로 급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 차질 없이 공급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 6.3GW, 용수 65만톤 ‘충분’
단축 방안 통해 18개월 공기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구간 분할 공사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남 반도체산업단 전력·용수 공급 관련 질의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톤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진다”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의 기존 발전 역량과 수자원이기도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이라며,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의 물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돼 왔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전력망 구축 일정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건의 평균 소요 기간(설계 15개월, 공사 4년 8개월)을 제시하며 정부가 제시한 18개월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신광주 변전소 선로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km 구간을 분기하는 방안과 공사 구간을 10km나 500m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설계 착수 및 입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세부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전기법) 자문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정책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김 장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명단 비공개 이유에 대해 “자문위원들한테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 쟁점은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검증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명단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